

롯데홈쇼핑 업무정지 후폭풍 커

중소 협력업체들 매출감소에 판로까지 잃을 위기로 불안감 증폭

롯데홈쇼핑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협력업체들의 불안감이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시장을 12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강 시장은 지난 9일에는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특수 4부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 조사를 받았다. 강 시장은 지난해 미래천조과학부의 방송채널 인허가 연장 심사 과정에서 미래부 등에 대한 금품로비를 지시했거나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10억원대의 로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강 시장에 대해 출국금지 등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4월 인허가 연장을 받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감사원

은 지난 3월 롯데홈쇼핑이 제출서류에 전·현직 임원들의 범죄 혐의 등에 대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미래부는 롯데홈쇼핑에 대해 6개월간 프라임타임(오전·오후 8~11시)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고,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다.

롯데홈쇼핑 사태가 이처럼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닫자 협력업체들은 사설상 '페니상태'다.

롯데홈쇼핑에 대한 업무정지 징계 발표 이후 협력업체들에 대한 대책이 일부 나오다가 현재는 이미저도 실현 여부를 장담할 수 없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롯데홈쇼핑에 따르면 중소기업 560곳이 롯데홈쇼핑 TV 방송을 통해 판매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중 173곳은 롯데홈쇼핑에 입점된 중소기업이다.

이들 협력업체들은 매출감소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판로를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협력업체들에게 제품 등을 공급하는 회사들까지 따질 경우 피해 업체는 훨씬 더 많아질 수 있다.

롯데홈쇼핑 협력사 비상대책위원회 진정호 위원장은 11일 뉴시스와 가진 전화통화에서 "롯데이만 단독으로 제품을 공급하던 업체들이 심각한 피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정부와 롯데홈쇼핑에 지속적으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구체적이지 않고 협력사들이 많이 흔들리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6일 협력업체들이 모여 롯데홈쇼핑측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고, 일부 대책을 들었다"며 "(프리미엄 6개월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기차분신청을 내리고 했는데, 롯데홈쇼핑 측은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말만 했다"고 설명했다.

/인진수기자



이웃도어 인기는 떨어지고 있는 반면, 골프웨어 성장세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해 4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신세계백화점 강남점에서 모델들이 골프의류와 용품 등을 선보이고 있는 모습.

아웃도어 지고 골프웨어 뜨고

2년새 3조원대로 성장

최근 국내 패션업체 기상도 중 하나는 '죽락하는 아웃도어'와 '뜨는 골프웨어'로 축약된다.

아웃도어 인기는 떨어지고 있는 반면, 골프웨어 성장세는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9년 35% 수준에 이르던 아웃도어 시장의 성장률은 2013년 19%, 2014년에는 9%로 추락했다.

반면 골프웨어 시장은 2013년 2조 원대 규모에서 2년 새 3조원대로 성장했다.

업체에서는 올해도 아웃도어 복종의 성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보고 있다. 잘못된 수요 예측과

과도한 영업관행으로 인해 시장의 질서가 이미 크게 망가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 지난해 훨라코리아 등 패션업체는 이웃도어 브랜드를 절수하기 시작했고, 올해에도 형지 등 벌써 2개 업체가 아웃도어 브랜드 철수에 나섰다.

조인영 한신피 애널리스트는 "불황의 지속, 더운 겨울, 공급 과잉에 따른 경기 경쟁 등으로 기존 이웃도어 업체 중 사업 중단 또는 리브랜딩 전략을 취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며 "업체별로 해외 시장 진출, 키즈라인 전개 등 블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이러한 전략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다.

/인진수기자

도내 소상공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20일까지 소상공인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내 소상공인들의 가게와 상품을 홍보하는 마케팅 지원 전략 중 하나이며 총 30개 업체를 선정해 업체별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을 돋는다.

신청대상은 희망창업, 시니어, 혁신형 기술창업, 4050 행복창업 프로젝트를 수료한 소상공인과 도내에서 사업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모바일 홈페이지는 상가 주소와 내비게이션 위치, 접포특성, 취급 상품 등 업체별 맞춤식 디자인으로 제작된다.

제작된 모바일 홈페이지는 SNS와 연계해 서비스를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www.jiba.kr) 또는 전화(063-717-1301)로 문의하면 된다.

/신광영기자



야구르트 라이트 · 월 저지방

올해의 녹색상품 선정

한국아쿠르트의 당줄이기 캠페인 대표 제품인 아쿠르트 라이트와 월 저지방 2종이 '소비자가 뽑은 2016 올해의 녹색상품'에 선정됐다.

'올해의 녹색상품'은 소비자가 시장에서 친환경상품을 선택해 녹색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가 주최하는 행사이다.

2008년 이후 올해로 8회째를 맞고 있는 이 행사는 전국 20개 소비자환경단체와 시민들이 후보 제품 선정부터 투표까지 직접 참여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아쿠르트는 2014년부터 2년간의 연구 개발을 거쳐 발효유 전 제품의 당 함량을 최대 50%까지 낮추는 등 식품업계에서 가장 먼저 당줄이기 캠페인을 펼쳐 왔다. 특히 올해의 녹색상품으로 선정된 아쿠르트 라이트는 기존 제품 대비 당 함량과 칼로리를 각각 50%, 33% 낮췄다. 기존 아쿠르트 대비 2~3배 높은 판매량을 보이고 있다.

/온진수기자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체 적발

전북농관원, 도내 198개소

도내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1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업체를 단속한 결과 198개소를 적발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43개소는 협사임경했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55개소는 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상반기 원산지 위반업체 184개소가 거짓표시 127, 미표시 57에 비해 7.6% 증가한 수치다. 소비자에게 원산지를 속여 혐사 처벌된 건수도 12.6% 늘었다.

위반업체 중 위반 정도가 중대한 6개 업체에 대해서는 구속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상반기 원산지표시 위반 물량은 폐기고기가 116톤으로 가장 많았고 쇠고기 19톤, 배추김치 17톤, 닭고기 11톤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87건(44.0%)으로 가장 많았고 가공업체가 29건(14.6%), 소형 할인매장 13건(6.6%)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는 배추김치가 81건(40.9%)으로 가장 많고 쇠고기 56건(28.3%), 돼지고기 44건(22.2%) 순이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생활 속에서 농식품의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 등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민형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전북중기청,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위해 '상황반' 운영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원탁)은 악의적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불공정 상황반'을 구성 운영한다.

불공정 상황반은 시전에방 활동에 중점을 두고 현장상담, 제도안내 등을 통해 거래관행을 정상화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확인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법률자문 분쟁조정을 통해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관련내용을 대폭 개선했다.

우선 11일부터 기존 신고전화(1670-0808)를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통합 운영키로 했다. 또 이달 말부터는 '의령제보센터'를 수시터거래 종합포털(<http://pdlsmba.go.kr>)에 신설, 신원노출 없이 불공정행위를 제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신광영기자